

“방학 중 석면 해체 날림 공사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 1172개교 가운데 631개교(53.8%)에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된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치원의 경우 광주·전남 792곳 가운데 141곳(17.8%)에서 석면 건축물이 확인됐다.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환경단체는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장기 계획을 존중하면서도 방학 기간 집중되는 석면 해체 공사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석면 해체 공사 업체 규모가 제한된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 졸속 공사 또는 감리부실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석면 해체 공사 일정 등 관련 정보가 학부모 등에게 충실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4일 광주·전남 초중고교 1172곳에 대한 석면 건축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2027년까지 광주·전남 초중고 631곳 등 ‘무석면 학교’ 시민단체 “목표 달성보다 안전 우선...공사 모니터링 공개를”

조사 결과,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631개교(53.8%)에서 석면건축물이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초중고 310개교 가운데 112곳(39.4%)에서 석면 건축물이 확인됐다.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 비율은 고교 42%(66곳 중 28곳), 초등학교 39.6%(154곳 중 61곳), 중학교 36.7%(90곳 중 33곳)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862개교 가운데 509개교(59.0%)에서 석면이 관찰됐는데, 이는 전국 광역자치체 중에서 석면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단체 측은 밝혔다. 초중고별 석면 학교 비율은 고교가 63.2%(144곳 중 91곳)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58.9%(462곳 중 272곳), 중학교

57.0%(256곳 중 146곳)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광주 전체 287곳 가운데 35곳(12.2%), 전남은 505곳 중 106곳(21.0%)에서 석면 건축물이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정부가 2027년 무석면 학교를 목표로 석면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대해 “목표달성보다 안전한 석면철거 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방학에 집중해서 석면 해체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날림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공기 일정 등으로 전체가 아닌 부분 해체가 이뤄지는 학교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공 경험과 인력 등을 보유한 석면 해체 업체가 제한

적인 상황에서 쫓기듯 공사를 몰아치면 되레 공사 후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날려 학생과 교사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석면 해체 과정에서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럿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유행으로 작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일부 학교에선 학생과 학부모에게 방학 중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공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키는 위험 물질”이라며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 구성 및 모니터링 ▲학교별 석면 건축물 일시 철거 ▲2027년까지의 석면 해체 공사 일정 공개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영돈 조선대 총장 증징계 받아 조선대 법인, 징계위에 의결 요구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증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법인 관계자는 “총장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총장에 대한 증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징계 범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총장 임용권자가 증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1주일, 최장 10여일 후에 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에서 민 총장에 대한 징계가 단행되면 대학이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등을 앞두고 학내 분란과 대학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교수 3명, 법인 이사 3명, 외부 인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대법 “일제때 한국에 본점 없던 대기업 재산, 귀속 가능”

‘국내서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 귀속재산처리법 기준 첫 제시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저수지의 제방(둑)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토지대장을 보면 이 땅의 소유권은 1920년 일본법인인 A사로 넘어갔다.

해방 후에는 군정이 토지를 관리했으며 이후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됐다. 이를 근거로 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일본법인 A사이니 아예 농어촌공사의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2심이 토지의 주인을 A사로 본 근거는 귀속재산처리법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의 2조 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은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될 뿐 토지 같은 부동산은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 법인 소유 자산으로 본 것이다.



고물고물 송편 만들어요 24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어린이 쿠킹클래스에서 열린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명성어린이집 아이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 같은 조항에 따라 1·2심은 다름이 된 토지 역시 대한민국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가가 2심 선고 직전에 마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도 같은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 대상상 소유 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일본 기관이나 일본인, 일본 단체가 소유했으나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양양된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이라도 일본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채 한국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토지 소유자를 일본 법인으로 보려면 단순히 토지 대상상 소유권자가 A사인 것으로 부족하고, A사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있었는지, 한국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시민·상인, 광주복합쇼핑몰 ‘공방’

상인단체 민관협의체 요구에 시민회의 “유치 무산·이권 노린 시도”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을 두고 시민과 상인들의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복합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상권은 복합쇼핑몰이 없는 지금도 인터넷 쇼핑과 역외소비에 고객을 빼앗겨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호남은 물론이고 충청 이남과 수도권에서 유동 인구가 몰려들어 지역 상권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단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한 것에 대해 “어등산 관광단지가 17년 동안 공회전하게 된 데에는 민관협의체가 큰 몫을 했다”며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사례인데 이런 민관협의체를 요구하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미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이런 법적 기구와 별도로 일부 이익집단화된 상인단체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 유치를 무산시키거나 이권을 노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회의는 또 “광주가 흔한 복합쇼핑몰이 아닌 낙후한 도시가 된 것은 투명한 절차와 법률이 아닌 집단의 힘에 좌지우지됐기 때문”이라며 “쇼핑몰 입지와 업체 결정은 철저하게 투명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 파산과 도산으로 이어질지 원치 않는다”며 “광주시는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속노조 “부당하고 근로자 그만 괴롭히고 복직시켜라”

광주 자동차 차체 제작 업체 특정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노동단체가 “해고자를 그만 괴롭히고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4일 광주 시 북구 풍기산업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기산업 측은 사내 비정규직을 도왔던 노동자를 표적 해고했다”며 “이를 위해 16년 전 학력 기재 누락을 문제 삼기도 하고 품질에 이상 없는 나서, 기역도 희미한 사소한 다툼 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등 4차례 모두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회사 측은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고된 지 3년이 가까워져 가는 피해자에게 이 정도면 법을 악용한 괴롭힘에 가깝다”며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만큼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대인시장, 한화생명, KT, (구)청자다방, 광주중앙초등학교, 대중병원, (구)김병원, 추선회관, 예술의거리, 세종약기, 주차장 입구, 음식의 거리, 동양저축은행, 금호시민문화관, 원각사, SK브로드밴드, 지하철 4호선 출구, 금남로4거리, 금남로공원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